

“수질 오염” 조심조심…둔치 흙 옮겨 물막이 공사

■ ‘영산강 살리기’ 승촌보 건설현장 르포

지난 17일 찾간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영산강살리기 6공구 승촌보 건설현장. 사업의 핵심 공정인 보(湫) 설치를 위한 물막이 공사가 한창이었다. 강 둔치에서는 굴착기가 굉음을 내며 토사와 자갈을 채취해 덤프트럭에 싣었고, 덤프트럭은 바쁘게 흙을 실어 강 어귀에 쏟아냈다. 굴착기가 흙을 파낸 곳은 물

러와 불도저가 바닥을 다지느라 둔치 이곳저곳을 누볐다. 사업 개요를 알리는 공사 안내판과 강의 예상 수위를 표시하는 수위 예측 붓도 눈에 띄었다. 강 본류와 인근에는 보가 들어설 위치를 표시하는 노란색 깃발들이 여기저기 꽂아져 있었고, 일부에서는 측량 작업도 진행중이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 진행 중인 19일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6공구 승촌보 건설현장에서 중장비를 동원한 토사 반출 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노란 깃발이 꽂아진 곳은 보가 설치될 위치.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보 공사는 전체 강 흐름을 차단하지 않기 위해 2단계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1단계 물막이 공사는 지난 10일 시작됐다. 강 폭 540m 중 2/3에 해당하는 강을 ‘ㄷ’ 자 모양으로 흙 약 9만 9천㎥양을 쌓아 물 흐름을 차단하는 작업이다. 물막이 작업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인 내년 6월까지 1차 구간의 보 공사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 인부들과 중장

따라서 앞으로 공사현장 인근 강에 오탁방지막도 겹겹이 설치하고 환경관리자를 상주시켜 수시로 수질 감시도 할 계획이다. 1단계 물막이 공사가 끝나면 그 위에 터파기 작업을 통해 보 구조물이 올라가게 된다. 본격적인 보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후 나머지 170m 구간에 대한 물막이 공사를 한 뒤 마무리 보 공사를 통해 승촌보는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공사는 원활하게 진행중이었지만 그림자도 있었다. 인근 15개 마을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민들과의 협의도 없이 공사 착공 5일 전인 지난 5일 토지수용 통보가 온 데다 수용 대상 인근 논밭이 주민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돌미나리 주산지이기 때문이다.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주민 고성기(62)씨는 “이 지역이 국내 돌미나리 생산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주산지인데다 주민들의 주요 수입원인데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토지를 수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영산강 6공구 토지수용반대 주민대책위 김재선(46)대표는 “인근 주민들에게 설명회 한번 없이 무작정 공사만 시작하고, 특히 보가 생기면 지역 주민들은 ‘물 폭탄’을 안고 살아야 하는 불안감과 공포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남도의 젓줄인 영산강을 살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는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공사로 인한주민피해와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세심한 배려또한 절실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흙 9만9천㎥ 쌓아 강 물 흐름 차단

“설명회 없이 토지수용” 주민 반발도

비는 더욱 바쁘게 움직였다.

현장 관계자들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주)한양의 이준범 부장은 “물을 막고 하는 공사여서 공기에 차질을 빚으면 큰일이기 때문에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특히 공사 과정에서 빚어질 수질오염에 가장 큰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보가 완성되면 고정보(고정식) 364m와 가동보(수문 가동) 176m로 이뤄지고, 보 위로는 길이 568m, 폭 12.5m의 도로가 만들어진다. 현재 강을 가로지르고 있는 학산교는 철거될 예정이다.

800kW 발전기 2대가 설치돼 연간 3천660MWh의 전기를 생산하는 소수력 발전도 가능해진다. 강 오른쪽에는 어류들이 오가는 길이 1.9km, 폭 75m의 어도(漁道)가 만들어진다.

세종시 직격탄…신음하는 지방

3 전문가 제언

충청권 달래기 땀질 처방 안돼

세종시 해법은 국토 상생발전

세종시 수정 여부가 핫이슈로 등장했다. 안타까움과 함께 하루빨리 다음의 2가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먼저 ‘추진 중인 세종시의 컨셉을 굳이 바꾸어야 하는가’이며, 다른 하나는 ‘세종시가 충청권만의 신도시 개발 사업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에 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세종시 수정 구상이 ‘충청권 민심달래기’ 차원에서 진행되는 듯한 정치적 기싸움의 대상으로만 다루어져서는 안되고, 전국토의 상생발전을 고려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가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세종시의 컨셉을 수정해야 하는 명분으로 중앙부처의 지방이전으로 행정효율이 저하되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이 저하되는 ‘망국병’을 들고 있다. 이는 철저한 수도권 지상주의적 발상이다.

세계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영국과 프랑스가 수도권 소재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킨 후, 관련 기업과 연구소를 불러들여 경제집적기반을 갖춰 지방경제를 활성화시켰다는 점은 남의 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공직자 가운데 80% 이상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4년제 대학 100개 가운데 97개가 지방에 입지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다.

기업만 옮겨선 균형발전 성공 못해

수도권의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하면 된다는 반론도 있겠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세계적으로 부처나 공공기관이 먼저 이전하지 않고, 기업만 지방으로 이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사례는 없다.

국내에서도 기업의 지방이전은 중앙정부의 의지만으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수차례 입증된 바 있다. 1999년 ‘기업체의 지방이전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당시로서는 과격적인 지원방안을 도입추진했으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충청권 북부지역과 강원 남부지역에 일부 이전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우리는 세종시 건설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분산시키지 않고, 수도권의 지근거리에 있는 한 곳에 집적시키는 사업임에도 망국병으로 편패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상상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앞선다.

후자인 세종시 수정과 관련해 굳이 세종시의 컨셉을 바

꾸어야 한다면 단시일 내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효과를 상회하는 정도의 구상으로 충청권의 민심만 달래는 임기응변식 처방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충청권은 수도권과의 지근거리에 있다는 이점 때문에 산업기반이 활발하게 확충되어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세를 지속해 왔다. 세종시가 건설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보더라도, 수도권과 충청권을 합한 6개 시·도는 면적이 전국대비 28.4%임에도 인구는 이미 전국대비 60%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그럼에도 충청권에 대규모 기업중심도시를 건설한다면 현재도 전국인구의 40%에 불과한 영·호남의 발전 전망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지방 혁신도시·기업도시 고려해야

강조컨대, 세종시 수정 해법은 충청권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세종시 수정 구상은 최소한 영·호남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10개의 혁신도시와 6개의 기업도시를 고려하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일례로 전국 초유의 한·중산단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무안기업도시가 중국의 파트너로 참여할 국내기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나 입지를 희망하는 기업이 없어 고민하는 여타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등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세종시만을 대기업, 명문 대학 이전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족형 첨단과학도시로 건설한다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당장의 기업여건나 정주여건이 불리한 영·호남의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동지기를 틀 기업이나 대학이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주민의지를 결집해 발전속도를 내고 있는 광주·전남 시·도민의 기대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 건 철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THANKS FESTIVAL

30-20% OFF

기간 : 11월 20일(금)~ 12월 6일(일) 일부품목제외

